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한환 한국판뉴딜
		배포일	2021. 9. 13.(월) 총 7매(본문 2, 참고 5)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과장 최성용, 사무관 신영락, 주무관 김현정 ·☎ (044) 200-5300, 5303, 5308	
보도일시		2021년 9월 14일(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상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대기청(NOAA)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해군, 해안경비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IMDC(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해양폐기물조정위원회)를 운영

\*\* 플라스틱 생산(산업통상자원부), 육상환경 및 플라스틱 처리·재활용(환경부), 해상환경(해양수산부), 국제협력(외교부) 등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2022년 2월 예정인 차기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10월 14일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 (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도록 구성되므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과 안건 발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구성배경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20.3,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제시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20.9.29,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

## □ 위원회 개요

- (목 적)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안전과 대책을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참여하여 심의·조정하고 상호 협력
- (근 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
- (안 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중앙과 지방의 갈등 조정, 법령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대응 등
- (기 타)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하 실무위원회\* 운영

\* 위원장(해양환경정책관)과 9개부처(4급이상), 3개 공공기관,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 □ 위원회 구성

## &lt;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gt;

-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외 해양폐기물 문제와 관련도가 높은 9개 부처\* 차관급공무원 및 3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여

\* (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 당연직 위원 외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

\* 10명 구성(안) : 국제 협상.협력<sup>1</sup>, 자원순환<sup>1</sup>,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sup>2</sup>, 육상 폐기물 관리<sup>2</sup>, 해양 폐기물 관리<sup>2</sup>, 시민협력<sup>1</sup>, 기관 간 협력.조정<sup>1</sup>

## &lt;실무위원회&gt;

-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당연직 참여기관(12개 기관)과 실무위원회 참여가 필요한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고려, 25명 이내 위원수로 구성

\* 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3. 「어촌·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